

정보인프라 구축은 선택 아닌 필수



장 문 익

효성데이터시스템(주) 대표이사

조성을 착수하였으며 아시아 국가 중 정보통신 기반구조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싱가포르는 세계의 중심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Intelligent Island化를 목표로 한 ‘싱가포르 One’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말레이지아도 2020년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 ‘Vision 2020’ 달성을의 일환으로 ‘Multimedia Super Corridor 계획’을 발표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얼마전 정보통신부가 ‘정보인프라 구축’ 수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통신 인프라 부문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정보고속도로 완성을 2010년으로 5년 단축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02년까지 인터넷을 포함한 PC통신 예상가입자 1,000만명 가운데 75% 수준인 745만 가입자에게 고도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예상가입자의 90%정도에 대한 고도정보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실질적으로 전국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또한 민간투자 확대를 촉진한다고 한다.

정보통신부의 이와 같은 계획은 미국 등 선진국의 추진상황에 비해 오히려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정보고속도로 구축일정 단축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앞서가기보다는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선진국이 기술발전 추세를 예측해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적어도 이번 수정안 대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선진국의 발걸음에 뒤처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로 이제는 통신기간망을 일반에게 완전 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민간주도의 정보통신 기반이 형성되어 국민생활에 쉽게 활용되어야 한다. 정보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느냐’를 기본 토대로 정보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통신기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범을 만들어 경제, 문화,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정보활용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